

# 민주 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까닭

한완상



**한완상** | 1936년 충남 당진 출생 ● 1960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1967년 예모리대학교 대학원(미국) 사회학 석사, 박사 ● 1970년-76년 서울대 문리대 조교수, 부교수 ● 1976년 해직 ● 1977-80년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이사장 ● 1980년 서울대 부교수 복직 후 2차 해직(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980-81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복역 ● 1984-93년 서울대 복직 ● 1993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1994-98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1995-97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경제정의실천연합 고문 ● 1999-2001년 상지대 총장 ● 2001-2002년 1월 부총리 겸 초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현재 한성대학교 총장,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북한옥수수수십기범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 저서 : 『지식인과 허위의식』, 『민중과 지식인』, 『민중시대의 문제의식』, 『민중사회학』,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외 다수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정의를 위해 힘쓰고 애썼던 동지로서 그의 퇴임을 한없이 축하해 주어야 하고 뿌듯한 자긍심으로 그의 은퇴를 축복해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나는 이토록 공허한 느낌을 느끼게 될까? 하기가 5년 전 김영삼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불안한 중에서도 신나게 뛰어다녔던 재야시절에 견주어 왜 나는 지금 그토록 허무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일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군사권위주의 정치에 맞서 싸우는 일은 때로 피를 말리는 아픔을 동반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은 더 어려운 것 같다. 군사독재와 맞서 싸울 때는 괴롭고 아프더라도 신나는 일이었는데,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은 왜 이토록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될까? 우리들이 antidemocracy 투쟁을 할 때, 그때 민주투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철저한 '세우기 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짤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사실 지난 일 년간 나는 무척 초조했었다. 아니 DJ 집권기간 내내 불안했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YS 문민정부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이 실패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그 낙인이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 속에 깊이 수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DJ 국민정부마저 실패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를 항상 염려해 왔다. 여기에는 역사적 까닭이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자. 독일은 장기간의 비스마르크 권위주의 체제 아래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1차 세계 대전을 겪게 된다. 독일인들은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됐다. 그때 독일의 민족자긍심은 처참하게 깨어졌다. 패전에 따른 경제적 궁핍은 극에 달했다. 패전국으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가난과 위기의 국면을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대로 돌파해내지 못했다. 독일 국민들이 일찍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로운 민주정치를 당시 바이마르 체제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내지도 못했다. 분출하는 국민욕구를 성숙한 민주주의 세우기에 절도있게 조절해내지 못했다. 백가쟁명의 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민주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 있는 당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인식됐다. 새로 주어진 자유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가치요 희망이었음에도 그 자유의 넘침이 혼란의 홍수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런 혼란속에서 독일의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들은 이른바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역설적으로 갈망하게 됐다. 바로 이 같은 독일 국민들의 마음받은 자유의 씨앗을 거부하고 통제와 질서의 씨앗을 뜨겁고 거칠게 요구했던 역설의 마음발이었다. 바로 이때 히틀러가 나타나 안정을 바랐던 그 마음발에 적절한 씨앗을 뿌렸던 것이다. 히틀러가 뿌린 씨앗이 자라,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나치의 나무, 비유대인 1100만을 살해한 극우의 나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민주세력이 위기 국면을 관리해 내지 못하게 되면, 반민주세력이 민주세력을 실패자로 몰아 부치면서 안정과 질서를 이데올로기로 내세워 새로운 독재체제 또는 전체주의 체제를 심게 된다.

나는 바로 이 같은 일이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 반복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기에 YS 정부가 실패로 끝났다고 떠들 때, 민주화 세우기의 앞날을 위해 DJ정부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성공을 이룩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DJ정부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세력 전체의 실패로 오인될 수 있고 그만큼 국가와 민족의 앞날이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김씨의 실패는 거의 필연적으로 한국적 나치세력 또는 극우 냉전세력의 발호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으시시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나의 인식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나는 DJ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그의 측근을 통해 민주적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을 그에게 환기시킨 적이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기 때문에 임기 동안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먼저 왜 개혁이 그토록 어려운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혁명이나 개혁 모두가 일종의 싸움이다. 반개혁, 반혁명 세력이 강고 할수록 그것은 어려운 전쟁일 수밖에 없다. 개혁 전쟁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까닭은 그것이 피아(彼我)를 선명하게

구분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에서는 적군이 우군 같기도 하고 바른 말하는 우군이 때로는 적군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피아 구분이 잘 되지 않으니, 진지 구축도 쉽지 않다. 구축한다 하더라도 한 진지 속에 적군이 쉽게 침투할 수도 있다. 아니, 때로는 유능하게 보이는 반개혁 인물들을 짐짓 개혁진지 속으로 끌어 들이기도 한다. 게다가 전쟁 깃발도 헛갈릴 수 있다.

원래 개혁은 혁명보다 늦고 답답하다. 그것은 적법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질서 안에서 개혁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존 질서를 우습게 보면서 반대자를 대적대적 길로뎡 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혁명에 견주어, 개혁은 너무 더디고, 그만큼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개혁에는 초법적 조치가 용인될 수 없다. 그만큼 개혁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에게나 개혁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는 개혁이 항상 그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된다. 개혁 피로증세는 특히 반개혁 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확산된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개혁 피로증을 과대 선전해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반개혁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렇게 개혁이 처음부터 혁명보다 어렵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한, 개혁을 즐기치게 추진할 에너지를 확보하기 또한 쉽지 않다. 그런데 YS나 DJ 모두 다 이 진리를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과신하는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 보려 했다.

개혁을 실패하게 하려는 반개혁세력의 전략은 치밀하고 강고하다. 이점 역시 두 김씨는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반개혁 세력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는 몇 가지 전략 가운데 오늘은 한 두가지에 주목해 보자.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그럴듯한 정책이다. 이 두 세력이 연대해 민주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근대화 세력은 지난날(일제 식민지 때나 군사 권위주의 때나) 민주화 세력을 억압했던 반민주세력이었다. 인권과 민권을 훼손했던 세력이었다. 근대화의 이름으로 민주화세력을 때로는 색깔론으로 때로는 낭만주의론으로 배척했다.

그리고 부당한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잔인한 가해자였다. 그러기에 그런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합해 가치있는 새 일을 해내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가해자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도덕적인 시인을 하고, 솔직한 사죄를 구해야 한다. 그러할 때 피해자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근대화 세력이 공적으로 그들의 지난날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 민주세력에게 사과한 일 없다. 오히려 온갖 구실을 부쳐, 근대화 세력의 역사적 공적을 길이길이 확대시키려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그들의 전략을 너무나 값싼 이해심으로 (무책임한 이해심이기도 하다) 또는 경솔한 자신감에 넘쳐 받아들여 DJP 집권은 시작됐다. 그리하여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로 행세하게 됐던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패착이었다. 이런 조건 밑에서 개혁이 성공할 리 없다.

근대화-민주화의 연대와 유사한 반개혁 세력의 전략은 이른바 탕평책이라는 것이다. 이제 집권했으나, 반대 세력들도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럴 듯하다. 그런데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려면, 특히 확고한 지지기반이나 광범한 지지기반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투철한 개혁동지를 중심으로 해 탄탄하고 탄력성 있는 개혁 주체 세력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 힘이 없을 때 탕평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탕평책의 이름으로 신집권 세력 안으로 들어온 반개혁 세력들은 이미 그들만이 갖고 있는 조직력과 자금 동원력 등의 정교한 노하우를 가지고 개혁 세력을 쉽게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두머리에게는 지극한 충성심의 애교를 떨며, 그를 제왕처럼 모시는 듯하면서 마침내 그를 고립시켜 버린다. 그리고 개혁세력을 권력핵심에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버린다. 결국 꼭대기는 기본 좋게 해주는 반개혁세력에 포위되어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가운데 온갖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세월이 빨리 흘러 임기가 끝나게 된다.

정말 개혁이 어렵다. 어려울수록 대통령은 개혁 중심 세력을 '시스템'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주요 직책자들과 독대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시스템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기의 정치신념이 같은 동지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중요한 정보를

그들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 자유토론, 이른바 brain storming session 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심복 또는 동지들 간에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문제를 접근·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자유토론에서는 선택결과의 유불리를 막론하고 모든 선택들(options)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기구 수뇌와의 독대를 통해 개별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게 되면, 보고자끼리 미묘한 경쟁심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 경쟁심리는 대통령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와 연결되어 상황을 각색하기 쉽다. 기분 좋은 보고들을 독점하게 되는 대통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왕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허망한 자기 과시욕이 생기기 쉽다. 이때부터 대통령 어깨에는 힘이 들어 가게 되고, 마치 황제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하기에 개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주는 힘도 갖게 된다. 이것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지도자일수록 반드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이다. 그런데 두 김씨는 이점에 있어 모두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민주화 투쟁에 있어 동지였던 인사들이 관료적 세련됨을 지니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개혁 중심 축에서 일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외됐고 그 결과, 거칠지만 진솔하게 대꾸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을 대통령이 스스로 고갈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만델라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 한국을 방문했었다. 나 자신이 대통령 특사로 그의 취임식 때(1994.5.10) 남아공에 간적이 있어서, 비록 그때는 정부 밖에 있었지만, 청와대 연회에 초청을 받게 됐다. 내가 앉았던 테이블에는 만델라 정부의 공보책임자가 함께 있었다. 그는 백인이었지만 만델라의 민주화운동(인종차별제도 반대 운동 포함)의 동지였다. 만델라 대통령은 그의 답사에서 그의 민주화 투쟁 동지와 동행했음을 알리면서, 그의 내무장관과 공보책임자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대통령 주변에 과연 그의 민주화 투쟁 시 동지들이 몇 명이나 정부 요직에 남아있나를 새삼 되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전혀 평가해 주지 않았음을 나는 새삼 깨닫게 됐다.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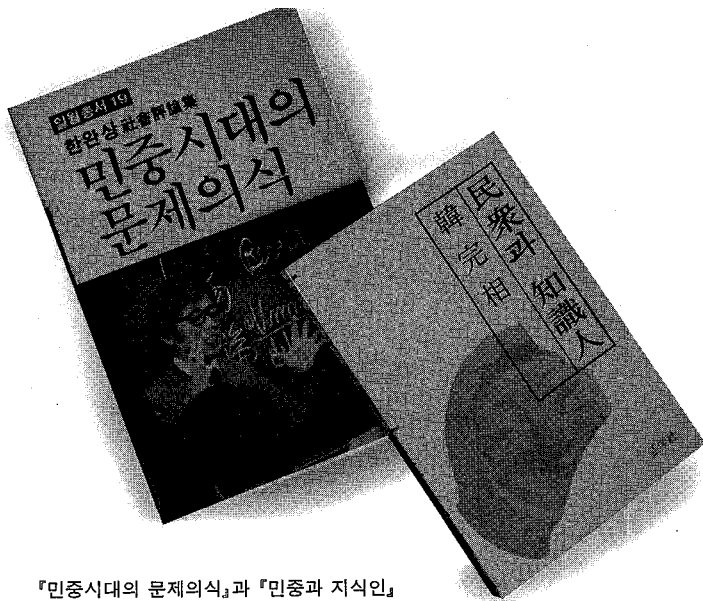
나는 문민정부 초대 통일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이 땅의 냉전수구세력으로부터 끈질기게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정말 외롭고 괴로웠다. 70년대 재야시절보다 더 아팠다. 그런데 단 한번 단 한마디의 격려나 위로의 말을 윗분으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랬기에 자기 동지들을 당당하게 외국 정부 요인들 앞에 소개하는 만델라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그의 시스템 운용을 보는 듯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민주화에 앞장 섰던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정부운영은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게 되나? 왜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폄하되고 있는가? 하기가 여기에는 수구 언론들의 편파적 보도와 해설이 작용해 온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 할 수 없다. 왜 개혁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을까? 왜 정보담당 요직자들과 대통령간에만 언로가 통하는가? 왜 요직자들 사이에는 개혁 팀의 연결망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회고해 보면, 내가 DJ에게 취임 전에 간접으로 올린 제언 중에 상황실 운용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시됐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전쟁이라면, 모든 전쟁에서 그러하듯, 개혁전쟁에 있어서도 상황실이 절대로 필요하다. 대통령과 신념을 함께하는 능력 있는 동지들로 하여금 상황실을 운용하게 해야 한다. 왜?

대통령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짧은 기간에 역사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실천하려면, 개혁프로그램을 우선 장, 중, 단기로 나누어서 중장기 개혁은 그것대로, 단기 개혁프로그램은 그것대로, 시간표에 따라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만일 특정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를 상황실에서 엄격하게 분석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결과 개혁 전쟁 수행능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적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인사조치는 최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먼저 병참지원(logistic) 분야에서 허점이 없었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지원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한다.

반개혁 세력의 조직력이 막강하고, 그 자금력이 튼튼하며, 그 이데올로기적 전략



『민중시대의 문제의식』과 『민중과 지식인』

이 뛰어날 수록, 개혁 중심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힘있게 작동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상황실의 역할은 크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YS, DJ 두 정부에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정말 안타까워 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93년 2월초에 나는 YS로부터 깜짝 놀랄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장 자리를 맡아 달라고 했다. 나는 겁이 나서 곧 사양했다. 대신 K씨, P씨, H씨를 추천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하면서 나에게 “5년간 멋지게 개혁하려면 한박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두려웠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느날 (물론 취임 전) YS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국무위원으로 쓰실 분들이 빨리 결정되면, 그들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신정부 정책, 신정부 철학 등에 관한 연수 모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은 한 팀으로 일해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개혁주체의 역할을 해내려면 먼저 새로운 정부의 철학을 서로 이해해야 하며 또 내조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YS는 단번에 안 된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이 미리 발표되면, 언론들이 온갖 상처를 입히게 되어 일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에 빠진다고 했다. 그때도 나는 도무지



원래 개혁은 혁명보다 늦고 답답하다. 그것은 적법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질서 안에서 개혁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존 질서를 우습게 보면서 반대자를 대적대적 길로땡 식으로 제거 할 수 있는 혁명에 견주어, 개혁은 너무 더디고, 그 만큼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언론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온갖 상처를 입히려 들 터인데 말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시스템이 형성되면, 그 같은 공세는 어렵지 않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게다가 이제 새로운 문민시대가 막 열리려는 즈음, 곧 군사권위주의 시대의 종막을 알리고 새 민주시대를 펼치려고 하는 이때 새 시대를 이끌어갈 기관차 노릇을 해야 하는 내각이 새 시대 정신이 무엇이며, 새 시대 정책을 어떻게 한 팀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문제제기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기회를 단 한번도 갖지 못했으니, 정말 답답하고 한심했었다.

나는 민주화에 앞장섰던 두 어른이 대통령이 되어 두 분 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 곧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남기게 됐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기가 이 같은 이미지 창출은 앞에서 말한 대로 수구언론의 전술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총재시대의 'No system' 관행을 집권 후에도 계속 했다는 것을 가버이 여길 일 또한 아니다. 그분들의 특출한 카리스마의 매력이 투쟁상황에서는 힘의 원천이었지만, 집권 후에는 그것이 부정적 마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겸손히 성

찰해 볼 일이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했다. 그는 역사적 행운아처럼 보인다. 그는 두 김씨와 달리 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는 수구세력으로부터 빛진 것이 없다. 그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만큼 그에게 개혁실패는 변명의 여지없이 가혹한 역사적 비판을 몰고 올 것이다. 그는 두 정치 선배들로부터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두 분의 실패사례를 역사적 거울로 삼아 매일 매일 자기 모습을 냉혹하게 성찰해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면서 지난 대선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얼마나 가슴 조렸는지를 말하고 싶다. 두 김씨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는 처절한 상황에서, 민주세력의 보루로 작동해야 마땅할 여당마저 노후보를 냉대했으니, 만일 노후보가 낙선되는 경우 우리의 역사는 저 1920년대 후반의 독일 상황처럼 되지 않을까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게 두려워했었다. 이 두려움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흑독하게 추웠던 겨울 공화국 그때의 두려움보다 더 강렬했고 더 절박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극도로 위태로워지고 있어, 냉전 수구세력의 집권이 몰고 올 정치광풍을 상상만 해도 그것은 나에게서는 가위눌림, 악몽 그 자체였다. 그러했기에 2002년 12월 19일 저녁 9시의 개표 보도는 나에게서는 하나의 역사적 희망의 햇살로 다가 왔다. '한국의 바이마르 정부'는 적어도 히틀러 같은 수구 세력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감격했다. 그러나 이 안도감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아직도 이 땅에 시퍼렇게 살아 남아있는 냉전수구, 반개혁세력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두 김씨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는 일에 그토록 신속했던 그들의 축적된 기술이 아직도 견재하다면, 노무현 정부도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새 정부는 지난 두 정부로부터 값진 교훈을 항상 깊이 명심해 반개혁세력을 제어할 탄탄한 민주적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해 앞으로 5년간 일관성 있게 개혁 전쟁을 치뤄내야 한다.

희망은 있다. 이제는 아날로그 정치시대가 아니다. 디지털 정치시대의 주역은 비록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어도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젊은 네티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쌍방향통신매체로 신속하게 상황을 올곧게 판단하고 토론하면서 공론화된 명분있는 문제들을 오프라인에서 힘있게 실천으로 해결해내는 젊은 폴리티즌(politizen)들이 굳게 버티고 있다. 그들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5년간 줄기차게 개혁으로 달려 나가는 노무현 정부를 뜨겁게 지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최선진 '원격 참여 민주주의 tele-democracy' 국가모습을 세계만방에 보여 줄 것이다. 이들의 역사적 기대와 소망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쪼록 디지털시대에 국민참여 정치를 성공시킨 세계 최초의 디지털대통령 곧 tele-democracy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의 재임기간에 남북간에는 평화가 큰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동서간에는 화합의 큰 마당이 넓게 이뤄지며, 가난한 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며, 부자와 엘리트들이 더욱 겸손해지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새 역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제 한민족은 동쪽 끝 변방(극동이라는)에 자리 잡은 후진국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조정자 역할을 감당해내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민족에게는 당당한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성숙한 주인의식을  
시민에게는 즐거운 참여의식을 심어주기 바란다. ■